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9. 1.

행 정 재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영 교

1. 제안요지

- 가. 의안번호: 제1799호
- 나.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 8. 17.
- 라. 회부일자: 2022. 8. 23.

2. 제안이유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동구에서 선도적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관련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 나.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제6조)
- 다.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안 제8조, 제9조)

- 1)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 구체화
- 2)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승격, 민간 참여 확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2. 7. 14. ~ 2022. 8.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가. 제안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성동구가 선도적으로 제정한 본 조례는 우수 조례¹⁾로 지정되는 등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조례로 이후 전국 99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정부에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1)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건의료, 돌봄, 물류, 대중교통, 교육, 환경 등 필수적인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이른바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2020.12.24.)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1.5.18.)함

〈 「필수업무종사자법」 주요 내용 〉

- 가.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제2조제2호)
- 나.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 다.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제8조)
- 마.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
 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11조)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서는 다양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
 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따라 필수업무를 대면업무에 한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자 ‘필수업종’을 법률용어인 ‘필수업무’로 통일하였음
- 이는, 필수업무의 범위를 대면업무로 한정하면 다양한 재난상
 황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필수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국한되지 않도록
 법률 용어 정의에 따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였
 으며, 법률에서는 이들에 대한 용어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정
 의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제정한 취지를 살려 ‘
 필수노동자’로 정의²⁾하기로 함

2) 조례제정 99개 자치단체 중 69개 자치단체가 ‘필수노동자’로 용어 정의함(법제처 법령
 정보센터 자료 참고)

- 구청장 소속 지역위원회에서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 범위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 규정(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별도로 구청장이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

○ 성동형 필수노동자 약 6,226명

(2022. 7. 기준 / 단위: 명)

분 야	종사업종	인 원	관련기관
합 계		6,226	401개소
복 지 · 돌 봄	요양보호사, 생활복지사 등	2,967	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돌봄센터 등 123개소
보 육	보육교사, 조리사 보육도우미 등 보육종사자	1,691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155개소
공 동 주 택	경비, 청소 노동자	1,340	공동주택 107개소
운 송	마을버스 운전 종사자	108	운수회사 7개소
보 건 · 의 료	병의원 청소, 경비, 급식 등 의료지원 종사자	120	병의원 9개소

- 안 제6조(지원계획수립 등)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포함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 규정(제11조)과 재난의 사전 예측이 어렵고 재난발생 시 재난의 특성에 따라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가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재난 발생 시’ 수립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법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함
- 안 제9조(위원회 구성)에서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있는 법 제10조와 고용노동부, 민간참여의 폭넓은 보장 권고에 따른 위원회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 안 제10조(위원의 임기)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 취지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위원의 임기 3년을 참고하여 지역위원회 위원 임기를 연장(2년 ⇨ 3년)하고, 1회 연임 제한을 삭제한 것으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위원회 재구성 등의 사유로 회의 개최가 지연되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 판단됨
- 최근 청소, 경비, 택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권 차별적인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에 대

한 논의 동향 및 정책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리 구 지원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구 관내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계법규 >

붙임 1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p>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군·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